

“문화재 훼손 위험” vs “발굴되면 가치따라 조치”

국감 이틀째 여야 4대강 공방...대북지원 문제도 집중 거론

5일 법제사법위를 비롯해 13개 상임위 별로 이뤄진 국회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과 대북(對北) 지원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통일부 국감에서는 천안함 사태 이후 중단된 대북 경제협력 및 지원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문화재청이 중단되면서 북한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늘어났다"며 "남북경협이 활성화는 진정한 친 중소기업 정책인 만큼 정부는 하루 빨리 정상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단의 옥수수 종자, 1억 3000만 원 상당의 안경, 2000만 원 상당의 운동화, 빵을 만들기 위한 밀가루 9000만 원 어치 등 총 28억원 상당의 민간단체의 지원 물자가 창고에서 썩고 있다"고 비판했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 간의 설전도 곳곳에서 전개됐다. 문화재청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국감에서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4대강 주변까지 각종 공사가 진행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문화재가 사라질지 알 수 없다"며 4대강 사업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문화재가 발굴되면 심상하고 가치 여부를 따지고 적

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절차"라면서 "가치 유무에 상관없이 공사를 중단시키려는 의도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이 선거법 위반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김중조 의원은 "중앙선거위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의견 표명을 공식선거법 위반이라며 종교, 환경, 시민단체 등의 발을 묶어놓고 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장재환 의원은 "이는 독재정권에서나 있었던 일"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4대강 터키공사 입찰합의 조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4대강 터키공사 입찰합의 의혹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공정거래위의 4대강 입찰합의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공정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공정위의 대기업에 대한 미온적 태도도 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지난해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행위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취한 사건 3084건 가운데 수사기관 고발 건수가 1.4%에 불과하다며 "미온적 대처는 기업 부패를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국감 브리핑

“혁신도시 청사 건립 지역 건설업체 참여 검토”

윤증현 장관 답변

그동안 배제했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인 혁신도시 건설 사업(광주일보 9월17일자 8면)에도 지역 건설업체의 의무 참여가 보장될 전망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나주에 건립 중인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등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혁신도시 사업에 국가계약법 제약 없이 대해 윤증현 기재부 장관은 “다른 것에 무리가 거더라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혁신도시 건설 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의무공동도급 제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국가기관 공사비 76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역업체 의무 공동도급제를 적용하고 있어, 나주에 건립 중인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한국전력공사 등 15개 이전 기관 모두 76억원을 초과해 의무공동도급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사업이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라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4대강 사업은 공사금액에 관계 없이 터키 방식은 20% 이상, 일반공사 40% 이상 지역업체 공동참여를 의무화 하고 있다. /박성욱기자 jwpark@kwangju.co.kr

중요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률 ‘전남 꼴찌’

장병완 의원 지적

전남지역의 중요목조문화재(국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민주·광주 남구) 의원이 문화재청으로 제출받은 ‘중요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현황’(9월말 현재)에 따르면 전남지역 중요목조문화재(국보·보물) 18건 가운데 단 2건(11%)만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전국적으로는 서울과 부산, 경기, 제주가 100% 화재보험 가입률을 보였으며, 인천(66%)과 충북(40%), 전북

(37%), 충남(33%) 등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전국 평균인 29%를 상회했다. 반면 강원(16%)과 경북(12.5%), 전남(11%) 등은 전국 평균치에도 훨씬 못 미쳤다. 또 대구와 대전은 전혀 가입되지 않아 0%를 기록했다. 전남도 내에서 화재보험이 가입된 2건은 국보 304호인 여수 진남관과 보물 1311호로 지정된 순천 선암사대웅전으로 조사됐다. 전남도 내에는 구례 화엄사 각황전(국보 67호) 등 5건의 국보와 영광 불갑사 대웅전(보물 830호) 등 13건의 보물급 목조문화재가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장군의 아들’ 軍 복무여건 특혜 의혹

신학용 의원 제기

군 복무 중인 현역 장성의 자녀들이 부대 및 특무기 배치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5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 사병으로 복무하는 장군의 자녀 39명(훈련병 2명 포함) 중 해외 파병자는 6명이었다. 신 의원은 “레바논 평화유지군 동명부대는 평균 경장률이 11대1에 달할 정도로 선발되기 쉽지 않았고 전체 사병 중 해외파병자는 1% 미만이라는 점에서 장군 자녀의 해외 파병 비율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그는 “해외 파병 장병은 월급 외 수당을 받는데 과거 자이툰부대는 병사 기준 월 1800달러 기본수당에 위함도에 따라 기본수당의 135%를 추가로 받으며 동명부대 병사에게는 한 달에 1천280달러씩 유엔에서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군 장성의 자녀들이 일반 사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양호한 주목기를 부여받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현역 장성의 자녀 중 자대 배치된 육군 사병은 32명인데 이중 6명(18.7%)만 보병, 포병, 기갑병 등 전투병으로 근무하고 있어 육군 전투병 비율 50%를 크게 하회한다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 국방 “軍 가산점 부활 추진”

김태형 국방장관이 5일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 가산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산대령 국민중심연합 의원의 주장에 대해 “장병들의 군 복무를 보상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큰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가산점제”라며 “그러나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 절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병 복무기간 단축의 재조정 필요성을 묻는 박상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복무기간 단축으로 병사들의 숙련도가 떨어지고 병력도 2021년 이후에는 50만명 기준으로 1만~6만명 정도 부족해진다”며 “21개월 정도로 하면 그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할뉴스



5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군 관계자들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할뉴스

국내 탈북자 1만9000명 돌파

지금까지 국내로 들어온 북한이탈주민 수가 1만9000명을 넘어섰지만, 이중 절반 가량이 50만 원 미만의 월수입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적 외상을 겪는 탈북자가 최근 3년 사이 117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교통상부 5일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동철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 재외공관에서 보호한 뒤 국내로 이송된 탈북자 숫자는 통계를 시작한 이래 올해 7월까지 모두 1만9444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입국 탈북자 숫자는 2001년부터 매년 1000명 대를 유지해오다가 최근 4년간 매년 2000명 대를 기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공정위, 대·중기 상생협력 구호뿐” 질타 쏟아져

국회 정무위원회는 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국가 역점사업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질책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공정위 소관 법률 중 하도급법 위반이 연 2000건 안팎으로 매년 분야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그러나 하도급법 위반 대기업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선 의원은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도입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도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상당수 업체는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다”며 “특히 2, 3차 영세 수급사업자들은 이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에 이른 사건은 불과 11건으로 이는 공정위가 경고 이상의 조치를 취한 사건 중 1%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며 “고질적인 하도급거래의 법 위반 관행은 공정위의 처벌과 제재 수준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지

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성남 의원은 공정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 “협약 체결만 해도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등 대기업에 과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상생협력을 도모하기보다 협약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공정위의 4대강 사업 입찰합의 의혹을 둘러싼 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며 공세를 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제발
멈추기만 해도 땡큐죠

빠지는 머리카락 개수에 신경 쓰이면 효과가 검증된 탈모증 치료제를 사용해 하니다

14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피부과에서 남성형 탈모증 환자(18세~65세 남성) 170명 대상 임상시험 결과, 모발 개수와 굵기가 증가되어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검증된 탈모증 치료제
마이녹실

■ 마이녹실 임상결과

참여자의 92.9%가 효과 확인

매우호전	호전	약간호전	기타(호전없음, 악화)
2.94%	27.65%	62.35%	7.06%

전국 14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피부과에서 남성형 탈모증 환자 170명을 대상으로 마이녹실 5% 24주간 임상시험 결과, 158명 중 92.9%가 호전되어 그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매우호전 5명(2.94%), 호전 47명(27.65%), 약간호전 106명(62.35%)

남성형 탈모증 환자에 대한 5% Minoxidil 외용액의 공개 다기관 임상연구(제4상 임상시험, 대한모발학회 공동연구) - 대한 피부과학회지 2009년 3월호 발표

■ 임상연구 참여기관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관동여대 명지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원주외과대학 원주동병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이상 가다나 순) 14개 대학병원 피부과 공동참여

바르는 탈모치료제
마이녹실

1일 2회 4개월 이상 꾸준히 바르십시오

검색어: 검색

제품문의 | 080-024-5525
02-2600-3884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편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꼭 읽고, 의약품사와 상의하십시오.]